

# 1072일, 111명 그리고 역학조사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 역학조사 기다리다 죽어가는 노동자들

유방암 말기로 투병 중인 최진경(49)씨의 사연이 지난 10월 12일 국회에서 소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리로 최씨는 이날 직접 자신의 사연을 밝히려 했지만, 국회 대신 병원을 가야 했다. 그는 “암이 온몸에 퍼져 잘 걷지도 못하고, 당장 하루 앞을 장담하기 힘들다”며 “마지막 희망으로 신약을 써보기 위해 기다리는 중인데 간과 신장 상태가 나빠져 급히 병원에 입원한다”고 했다.

최진경씨는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서 17년 동안 연구원으로 일하다 2018년 유방암 3기 진단

을 받았다. LCD용 핵심소재인 감광재 개발업무를 하던 최씨가 화학물질을 직접 다룬 시간만 6년이다. 이듬해인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만 4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지난 7월 24일 끝내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려줬다. 이런 일은 비단 최씨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역학조사 평균 소요일은 희귀질환 관련 역학조사를 맡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경우 1,072일이 걸렸다. 희귀질환 외 나머지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평균 소요기간도 581.5일에 달한다. <표 참조>

최근 5년간 연도별 역학조사 처리현황 및 소요일수

(단위: 건, 일)

구분	직업환경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의뢰	회신	소요일수	의뢰	회신	소요일수
2018년	472	547	211.8	66	75	385.9
2019년	703	548	206.3	111	59	513.3
2020년	553	491	275.2	54	70	438.0
2021년	596	457	371.5	83	68	632.9
2022년	438	398	436.7	35	58	664.4
2023년 8월	152	335	581.5	18	36	1,072.0

왜 이렇게 역학조사가 오래 걸릴까.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역학조사 물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538건이던 역학조사 의뢰는 2021년 67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17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역학조사 수행 인력은 직업환경연구원 15명,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2명 등 27명이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죽어가는 노동자의 무덤이 늘어나고 있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신청을 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숨진 노동자만 111명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결과도 비슷하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역학조사 중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는 159명에 이른다.

##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

전문가들은 지금의 역학조사가 지나치게 재해보상의 과학적 입증 절차에만 매달려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 본연의 기능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진경씨처럼 하루하루가 고통인 사람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끝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겪는 고통의 영문조차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매일노동뉴스> 2023년 10월 12일자 “업무상질병 판정,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 제목의 칼럼에서 “대부분 질병이 ‘직업병’과 ‘직업병 아님’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설명한다. 돌림병 역(疫)자를 쓰는 역학조사는 개체가 아닌 집단에 대한 통계적 관찰에 근거해

평균, 분포, 비율 따위를 구하고 법칙성을 찾아 내 병(특히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밝히는 일이다. 그래서 역학조사는 일종의 확률이다. 질환과 업무 간 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역학조사관 그 누구도 100% 입증했다고 자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업무상질병 판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전문인력이 수백일, 수천일까지 시간과 비용을 쓰며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해보상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업무상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죽어가는 노동자 행렬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설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오랜 만에 여야가 같은 마음을 먹었다고 전해진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중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산재 선보장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산재 선보장 제도는 우원식 의원이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국가가 재해조사 기간을 도파하고도 승인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거나, 원인불명의 희귀질환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과학적 연구가 미흡한 경우에 국가가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산재 국가책임제’라고도 부른다. 모처럼 국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반갑다. 🗣